

## 8차시[서로 싸우다 의식불명이 된 C군,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 <학습목표>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조치의 종류와 내용 및 조치의 이행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종류와 이행 및 의견진술의 기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 <사례>

#### 사건의 개요

U시 T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B는 2011.6.20. 같은 반 친구인 C와 싸우다가 밀리게 되자 옆에 있던 A(만14세 2개월)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며, A와 B가 합세하여 B는 C의 무릎과 허벅지를 2회씩 차서 쓰러뜨렸고, A는 쓰러진 C의 얼굴과 가슴부위 등을 수차례 걷어차 치료일수 불상의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C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처음에는 호전의 기미를 보이다가 상태가 나빠져 의식불명의 상태가 계속 되었다. 한편 A와 B는 서로 상해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B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A는 정식기소되어 형사재판절차가 진행중이었다.

T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와 B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에게는 사회봉사 5일 및 특별교육이수 5일을, B에게는 출석정지 10일 및 특별교육이수 5일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대해서 C의 보호자는 가해학생 A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경미한 조치라며 C가 현재 의식불명이며 깨어날 가망이 희박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였다.

이에 T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재심의를 받아들여 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치위원회 개최일자를 A 및 B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재심의를 개최하여 A에게는 사회봉사 10일 및 출석정지 10일 및 특별교육이수 10일의 조치를 , B에게는 사회봉사 20일 및 출석정지 10일 및 전학조치 및 특

별교육이수 10일의 조치를 의결하였고, 학교장은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조치를 취하였다.

위 재심의 개최 및 재심의 의결에 대하여 A 및 B 학생의 보호자는 (1) C도 가해학생인데도 C를 피해학생으로 판단하여 C에 대하여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것은 잘못이며, (2) A 및 B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를 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며, (3) 재심의에 따른 자치위원회 개최에 대하여 보호자인 자신들이 참석할 수 없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일자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연기해주지 않는 것은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A 및 B 학생 보호자의 주장은 타당한가?

### 사건의 쟁점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학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및 가해학생에 대해서 반드시 자치위원회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지 여부 및 자치위원회 개최시 반드시 가해학생이 참석해야만 하는지 여부 및 자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및 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사건의 결말

위 사안의 경우 C는 피해학생이자 가해학생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C가 피해를 입은 정도나 의식불명 상태인 점, 즉시 회복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A에게 어떠한 보복이나 가해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점, 만일 동법 제17조의 1항 1호 내지 8호 처벌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위 C를 가해학생이라고 보더라도 동법 제17조 1항 1호 내지 8호의 조치를 내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C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C도 가해학생인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A 및 B 학생 보호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피해학생 보호자의 재심의 요구가 있었으며, C가 의식불명이므로 C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가 너무 가볍다면 새로운 증거자료인 C가 의식불명이며 깨어날 가망이 희박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였으므로 재심의 요건인 학교폭력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재심의

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서 T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재심의를 받아들여 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A에 대한 조치를 재심의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사전에 A 및 B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으나, A 및 B학생의 보호자는 통보된 당일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연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위원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자치위원회 개최일자를 통보한 것이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치위원회 개최일자를 통보하였으므로 A학생 보호자도 자신의 일정을 조정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볼 수 있다.

A 및 B 학생 보호자 중 한 명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 중 다른 보호자가 참석할 수도 있는 것을 것이다. 단순히 A학생 보호자 중 한 사람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당일 참석이 어렵다는 개인적인 이유만으로 가해학생측의 의견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 C도 가해학생인데도 C를 피해학생으로 판단하여 C에 대하여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2) A 및 B 학생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를 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재심의를 할 수 있으며, (3) 재심의에 보호자인 자신이 참석할 수 없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일자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연기해주지 않는 것은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전문가의견

전학은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가해학생의 소속을 다른 학교로 옮기는 조치이며,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서 전학조치를 의결하면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전학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9가지 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 중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맞게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의결하고 학교장에게 수 있다.

## 1. 서로 싸운 경우 누가 가해학생이고 누가 피해학생인가? - 동영상 강의

가. 가해학생, 피해학생의 정의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하며(동법 제2조 3호),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동법 제2조 4호).

나. 서로 싸우다가 다친 경우의 문제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학생이 더 많이 다치고, 다른 학생은 조금 덜 다친 경우라면 싸움을 한 두 학생 모두 가해학생이자 피해학생이 된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이때 가해학생에게 반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폭력 사안 조사결과 가해학생에게 선도·교육을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다. 일사부재리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말하며, 학생 등 특별권력 관계에 있는 경우 하나의 의무위반행위가 징계벌의 대상이 됨과 아울러 형사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종류는? - 동영상 강의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의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사회봉사, ⑤ 학교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 출석정지, ⑦ 학급교체, ⑧ 전학, ⑨ 퇴학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순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경한조치’에서 ‘중한조치’ 순으로 규정한 것이다.

####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 설명

#####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함으로써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 ②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③ 학교에서의 봉사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봉사에서 오는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한 조치이며, 가해학생에게 학교 내의 화단 정리, 교실의 교구 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 학생의 등교 도우미 등을 하도록 하는 조치이며, 수업시간에 학교 봉사를 실시하는 방법과 등교하여 수업시간에 참여한 후,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 ④ 사회봉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며, 가해학생에게 학교를 벗어나 복지시설에서의 봉사, 관공서에서의 심부름, 거리에서의 휴지 줍기, 교통안내 등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 ⑤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폭력적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 내외 특별전문가에게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이며, 가해 학생에게 공격성, 분노, 불안, 우울 등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이때 교육청에서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⑥ 출석정지

가해학생을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일시적으로나마 피해학생과 격리시킴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무단 결석’이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를 말한다. 학교생활기록의 출결상황 관리를 함에 있어서 학생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는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 ⑦학급교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이다.

#### ⑧ 전학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가해학생의 소속을 다른 학교로 옮기는 조치이며,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서 전학조치를 의결하면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전학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전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⑨ 퇴학처분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최후의 조치이다.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을 퇴학처분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초·중등교육법 제31조 5항),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6항). 그러나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내릴 수 없다.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병과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9가지 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 라. 학교의 자의 긴급한 경우 선도조치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의 선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3.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9가지 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 중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맞게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의결하고 학교장에게 수 있다.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여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하여 의결한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장은 자치위원회가 의결하여 요청한 조치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수정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를 거부할 수 없다.

#### 4. 가해학생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 보장 및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지 가. 의견진술의 기회보장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적절하게 보장하였음에도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결할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나.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지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5. 특별교육이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6.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이행강제

가.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나.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다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중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① 학교내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 이수,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⑤ 퇴학처분(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은 제외)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을 뿐이다.

다. 학교의 장이 가해행위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⑤ 출석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5호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와 제6호의 출석정지 조치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 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재심의 요청

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이의 제기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이의 제기시 원칙적으로 자치위원회가 재심의할 필요는 없고, 이 경우 피해자 측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의 제기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의 제기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시 가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재심의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가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자치위원회의 심의과정상의 문제점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리하기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여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하여 의결한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장은 자치위원회가 의결하여 요청한

조치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수정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를 거부할 수 없다.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다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중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 18조(학생의 징계)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① 학교내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이수,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⑤ 퇴학처분(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은 제외)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을 뿐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이의 제기시 원칙적으로 자치위원회가 재심의할 필요는 없고, 이 경우 피해자 측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의 제기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시 가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재심의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가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자치위원회의 심의과정상의 문제점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